

데이터기술 美의 79%... “아마존 맞서려면 규제 혁파를”

개인정보 규제완화 세미나

韓, 선진국比 인력·인프라 뒤쳐져
금융·유통·IT 융합해 서비스를
안전한 보호체계 먼저 마련돼야

“동·식물의 퇴적물인 원유가 산업혁명의 에너지였다면, 개인이 남긴 데이터는 4차산업을 이끄는 21세기 원유다.”

‘데이터 경제’ 시대, 단순히 대용량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을 넘어 그 안에서 가치있는 정보를 정제해낼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좌우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21일 서울 여의도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개인정보 규제완화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경제시대에 맞춰 데이터 3법을 신속하게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무분별한 데이터 활용으로 정보주체인 개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데이터 활용수준 63개국 중 31위”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이욱재 본부장은 ‘개인정보 규제완화 세미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활용이 국가와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인력과 인프라 면에서 모두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규제완화 세미나에서 조상규 변호사가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나유리 기자

그는 “선진국은 데이터 활용에 우호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강하게 개인정보를 규제하고 있다”며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국내는 시장규모가 작고 업종이 분산화 돼 있어 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컨대 금융업의 경우 은행, 카드, 보험, 증권, 캐피탈 등으로 분산돼 있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완화 없이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스위스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은 2017년 63개국 중 56위, 2018년 31위에 불과하다. 인공지능기술도 2018년 미국과의 격차는 1년8개월 이상 벌어졌으며, 데

이터 분야 기술은 미국대비 79%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 본부장은 국회에 발의된 데이터 3법이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사와 신용정보업체(CB)의 정보를 결합하면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시 사기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자산이 협소한 사람들은 개인정보 등을 활용해 신용평가 가점을 줄 수 있지만 데이터 결합·활용이 어려워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만 확보되면 가치있는 분야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으로 구성돼 있는 데이터 3법은 정보주체인 본인의 신용정보를 주도적

으로 관리할 수 권한을 부여하고, 데이터 활용 시 가명과 익명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 다른 데이터와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는 “한국 시장 진출하는 외국 기업은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라며 “아마존, 알리바바 등 세계적 기업들이 한국시장으로 진출해 오는 것에 맞서기 위해선 규제를 완화해 금융, 유통, IT 등을 융합한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막아야”

다만 4차산업시대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개인정보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상규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우리경제의 주력산업이 부진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은 더 이상 선택문제가 아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외국에 비해 포괄적이어서 법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변호사는 데이터 3법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악의적 이

용에 대해선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현재는 당초 수집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제15조, 제17조)에 따르면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제공이 가능하다.

그는 “개정안은 급변하는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대비해 합리적 범위 안에서 정보주체 동의없이 정보제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며 “이 경우 악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 가명정보 활용범위를 ‘학술연구’로 한정해 사회적 이익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확대하려던 가명정보 범위를 학술연구로 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변호사는 또 정보집합물(결합된 정보)을 허용하는 기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집합물의 허용범위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도 포함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의 고객정보를 결합시켜주고, 결합된 정보를 외부로 반출하는 해외 사례는 없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DGB대구은행-메디에이지, 금융·바이오테크 ‘맞손’
DGB대구은행이 바이오테크 전문기업 메디에이지와 건강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황병욱 대구은행 본부장, 김강형 메디에이지 대표. /DGB대구은행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 셀프연금 ‘부상’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개인이 직접 금융자산을 활용해 주기로 일정한 현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이른바 ‘셀프연금’을 활용하면 노후 대비에 유용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21일 발간한 은퇴리포트 제41호 ‘셀프연금의 의미와 효과적 활용방안’에서 “고령화로 노후준비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노후 소득 마련을 위한 여러 방법 중 셀프연금이 중요 대안으로 떠오른다”고 평가했다.

셀프연금이란 개인이 자신의 금융자산을 매달 연금 처럼 일정 금액씩 수령하는 것으로, ‘자가연금’ 또는 ‘DIY(Do It Yourself) 연금’이라고도 불린다.

연구소는 기존의 대표적인 노후 소득원인 국민연금과 종신연금보험의 한계 때문에 셀프연금이 주목받는다

했다.

이 연구소는 “부부가 국민연금에 20년 넘게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이 158만원으로 최저생활비(176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전부 조달하기 어려워 개인이 직접 다른 소득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신연금보험은 개시 이후 자산의 유동성이 낮을 뿐 아니라 자산운용, 연금수령이 자유롭지 않아 선호도가 낮지만 셀프연금은 자산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이른바 ‘연금 공백기’에 셀프연금을 활용하는 방안, 국민연금 개시를 늦추기 위해 셀프연금을 이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채윤정 기자 echo@

단기외채 비율 6년來 최고... 건전성 비상

한은 6월말 국제투자대조표

2분기 단기외채 비율 37.4%
단기외채 160억 달러 급증 영향

외채 건전성지표인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약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기외채 비중도 6년여 만에 최대 수준을 나타내면서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9년 6월말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7.4%로 전분기 대비 2.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4년 3분기(34.9%)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단기외채 비율이 높아진 것은 단기외채가 1400억달러로 전분기보다 106억 달러 급증한 영향이 컸다. 상승폭은 지난 2012년 2분기(3.2%포인트·1435억 8000만달러) 이후 7년 만에 가장 컸다.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 비중도 30.3%로 전분기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이 역시 2013년 1분기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단기외채는 외국인이 보유한 만기 1년 미만이 채권 혹은 대출금 등으로 국제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통상 단기외채 비율과 비중은 대외 지급능력과 외채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단기외채 비율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 자금 유출로 대외지급 능력이 악화하고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대외채권·채무 현황>

단위: 억달러, %, %p

구분	2018p			2019p		분기증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3월 말	6월 말	
대외채권	8,935	9,095	9,081	9,148	9,331	184
(준비자산 ¹⁾)	4,003	4,030	4,037	4,053	4,031	-22
대외채무	4,333	4,417	4,406	4,406	4,621	215
(단기외채)	1,250	1,277	1,266	1,294	1,400	106
순대외채권	4,602	4,678	4,675	4,742	4,711	-31
단기외채/준비자산	31.2	31.7	31.4	31.9	34.7	2.8
단기외채/대외채무	28.9	28.9	28.7	29.4	30.3	0.9

주: 1) 외환부유역 총액을 계상.

/자료=한국은행

야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한은과 정부는 단기외채 비율이 큰 폭 상승했지만 외채 건전성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통화정책 완화 기조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 국채·통안채 투자가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고, 상대적으로 단기외채 비율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은 관계자는 “단기외채 비율이 다소 상승했지만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며 “원화채권에 대한 투자가 대외 신인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외채 건전성이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외국인의 국내 국고채·통안채 투자가 늘고 외은 지점의 차입 등 원화채권 투자 수요 확대에 따라 단기외채가 늘어난 것”이라며 “단기외채 비율과 비중은 여전히 3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과거 위기 때나 다른 신흥국 상황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대외채무(해외에 갚아야 할 돈)는 전분기 대비 215억달러 늘어난 4621억달러

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1분기(222억 7000만달러)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대외채권(해외에 빌려준 돈)은 184억달러 증가한 9331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외채무가 대외채권보다 더 크게 늘어나면서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전분기보다 31억달러 감소한 4711억달러를 나타냈다.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지난해 4분기 이후 6개월 만이다.

대외금융자산(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은 거주자의 해외 지분투자(77억달러)와 증권투자(284억달러) 증가로 전분기 대비 481억달러 증가한 1조6215억달러를 기록했다. 대외금융부채(외국인의 국내투자)는 비거주자의 증권투자 증가로 221억달러 증가한 1조1592억달러였다.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260억달러 늘어난 4623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째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김희주 기자 hj89@